

정치적 민주화 이후 라틴아메리카 인권 정치와 대안사회운동

김은중(서울대 라틴아메리카연구소)*

- I. “세계인권선언”을 바라보는 두 개의 관점
- II. 앙겔루스 노부스: 거꾸로 된 세상의 인권
- III. 정치적 민주화 이후 라틴아메리카 인권 정치의 실상
- IV. ‘고강도 민주주의’와 라틴아메리카 대안사회운동
- V. 근대/식민 세계체제와 트랜스모더니티(trans-modernity)
- VI. 결론에 대신하여 - 차이와 소통의 정치학과 21세기 인권

정의는 뱀과 같아서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만 무는 법이다.
-오스카르 아르놀포 로메로(Msgr. Oscar Arnulfo Romero)
산살바도르 대주교, 1980년 암살됨.

I. “세계인권선언”을 바라보는 두 개의 관점

1948년 12월 10일 늦은 밤, 유엔총회에서 반대 없이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20세기 들어와 두 번의 세계대전을 치룬 인류가 기본적인 인권의 광범하고도 가공할 침해에 대한 전지구적 대응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인권은 인간이 성, 인종, 국적, 경제적 배경에 관계없

* Eun-Joong Kim(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of Latin American Studies, ocpaz@snu.ac.kr), “Human Rights Politics and Alternative Social Movements After Political Democratization in Latin America”.

이 누구나가 평등하게 갖는 보편적 권리를 뜻한다. 따라서 “세계인권선언”은 국제기구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의 보편적 자유와 권리에 대한 집단적 의식을 총괄적으로 대변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세계인권선언”의 초안을 작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르네 카생(René Cassin)은 “세계인권선언”을 네 개의 기둥과 하나의 천정으로 이루어진 사원(寺院)으로 비유했다. 첫째 기둥(제1-11조)은 인권의 일반 원칙과 개인의 자유를 의미하며, 둘째 기둥(제12-17조)은 개인과 개인이 속한 사회집단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권리이다. 그리고 셋째 기둥(제18-21조)은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권리를 의미하고, 넷째 기둥(제22-27조)은 사회적·경제적 영역의 권리에 해당한다. 이 네 개의 기둥이 모여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국제적 질서와 권리들을 서로 조화시키기 위한 원칙을 의미하는 천정(제28-30조)을 떠받치고 있다.

선언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인권이 오늘날 정치적 권리와 시민권으로 포괄되는 정치적 자유와 법적 보장과 같은 개념을 지칭한다는 것에는 쉽게 동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경제적 보장에 대한 권리나 교육에 대한 권리 등에 대해서는 논쟁이 뒤따랐고, 위원회의 심의가 본격화되면서 실질적 차이들이 명료하게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차이들이 발생하는 몇 가지 경계들이 존재했는데, 대표적으로 자연법 대(對) 실증주의, 자유주의 대 마르크스주의, 서방 국가 대 비서방국가 등의 대립을 들 수 있다(글렌 존슨 2002, 47-50).¹⁾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당시의 인권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보편적 인권의 실질적 내용보다는 인권의 국제적 이행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세계인권선언”에 포함된 특정 권리들에 대한 관점의 차이는 이후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었고, 선언에서 빠진 권

1) “세계인권선언”을 작성한 네 사람의 주요 인물은 위원회 의장이자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미망인인 엘리노어 루스벨트(Eleanor Roosevelt, 1884-1962), 중국의 유학자이자 외교관으로 부의장을 맡았던 즈양펑춘(張彭春, 1892-1957), 레바논의 실존철학자이자 위원회의 보고자였던 찰스 말리크(Charles Malik, 1906-1987), 프랑스의 법학자로서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르네 카생(René Cassin, 1887-1976)이다. 카생은 유대인으로 나치의 홀로코스트 대학살로 친지 29명을 잃은 유대국가 창설의 지지자였으며, 말리크는 아랍연맹의 대변인이라는 개인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미셸린 이샤이 2005).

리들도 있었다. 특정 권리에 대한 논쟁과 선언에 누락된 권리들은 인권 개념의 보편성이란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인권이 성, 인종, 국적, 경제적 배경과 관계없이 인간이 인간이라는 종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갖게 되는 권리를 뜻하는 것이라면 인권 개념의 보편성은 선언을 지탱하는 토대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보편적 인권 개념에 대한 연구는 인권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과정을 통해 인권 이론의 보편성을 찾아내려고 노력했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문화적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왔다. “세계인권선언”의 기초에 참여한 사람들조차도 이 선언이 아무런 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고 믿었던 상황에서 보편적 인권 개념은 인권 침해에 대한 개입의 근거로서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었다.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인권이란 ‘무엇’인가를 밝혀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세계대전의 과정에서 겪은 광범위하고 가공할 인권 침해의 경험을 통해 어렵게 마련된 보편적 인권 개념이 종전이 되자마자 시작된 냉전에 이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보편성을 통해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과 달리 인권 개념을 역사적 연속성과 변화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카생이 해석한 “세계인권선언”의 구조를 지탱하는 각각의 기둥은 인권 발전의 주요한 역사적 계기를 의미한다. 첫째 기둥(제1-2조)은 인종, 종교, 교의, 국적, 사회적 기원, 또는 성차를 떠나 모든 사람이 향유해야 할 인간의 존엄성을 의미하고, 둘째 기둥(제3-19조)이 계몽주의 시대 투쟁의 산물인 시민적 자유 및 기타 자유권 등 제1세대 권리(생명권, 인신의 보장, 가혹한 처우로부터의 여러 조처, 법 앞의 평등 등)를 나타낸다. 셋째 기둥(제20-26조)은 산업혁명 시기에 쟁취했던 제2세대 권리(사회보장, 노동권리,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 노동시간의 제한, 정기적인 유급휴가,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인 정치적·사회적·경제적 평등을 상징한다면, 넷째 기둥(제27-28조)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그리고 식민지 이후 시대에 고취되었던 제3세대 권리인 공동체적 유대 또는 민족적 연대를 뜻한다(미셸린 이샤이 2005, 56-57).

그러나 인권을 인간이 갖는 보편적 권리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든 인권의 역사적 출현 순서와 밀접하게 대응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하든 간에, 근대적 인권 개념은 유럽에서 비롯되었다는 유럽중심주의를 바탕으로 깔고 있다. 초안의 작성자들이 “세계인권선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선언의 전문(前文)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를 두고 논쟁을 벌였던 제1-2조는 인간이 향유해야 할 천부인권의 당위성을 제시한 것일 뿐이고, 그러한 보편적 인권이 역사에서 쟁취된 것은 유럽의 계몽주의와 산업혁명을 통해 가능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인권위원회 위원들이 새로운 보편 윤리를 찾는 과정에서 인권철학의 역사가 서구 전통의 범위를 벗어나 폭넓게 존재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보편적 인권이 18세기 유럽 계몽주의에서 기원한 서구의 발명품이라는 가정을 거부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카생에 따르면 “세계인권선언”의 세대별 인권이 프랑스혁명의 세 개의 기둥인 “자유, 평등, 박애”를 각각 나타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근대적 인권 개념의 유럽 기원설은, 미셸린 이샤이가 자신의 책 『세계인권사상사』에서 언급하듯이,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유럽중심적 인권 개념은 보편주의를 앞세우면서도 인권의 촉진 방법 그리고 동일한 인권을 향유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놓고 서로 모순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예를 들어, 계몽주의가 약속했던 자유주의의 비전에서 노동계급이 소외되면서 사회주의의 비전인 국제주의가 보편적 인권의 보장을 약속하고 나섰다. 둘째, 각 단계의 인권 기획은 민족주의와 문화적 권리의 등장을 촉진하는 모순을 내포했다. 이러한 모순은 제1세대 인권과 제2세대 인권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식민주의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따라서 제3세대 인권인 문화권 혹은 공동체적 유대는 제1세대 인권과 제2세대 인권 뒤에 오는 인권이 아니라 제1세대 인권과 제2세대 인권이 무시하고 억압한 인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적절한 분배나 상호인정을 받아야 할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문제가 또 다시 부각된다. 이런 맥락에서, “세계인권선언”은 선언이 갖는 본래적 의도와 상관없이 보편주의와 유럽중심주의가 상대주의와 타자성을

억압하는 것을 막지 못했고 정치적·경제적 폭력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빈번하게 악용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많은 이들에게 오늘날 세계는 선한 세력과 악한 세력 간의 싸움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선한 편에 서기를 원한다. 우리는 악과 싸우기 위한 현명한 비책들을 고심하기는 해도, 악과 싸워야만 한다는 점은 의심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누가 그리고 무엇이 악을 구현하는지에 관해서도 그다지 의심하지 않을 때가 많다.**

미국과 영국이 유난히 심하지만 비단 두 나라에 국한되지 않는 범유럽 세계 지도자들과 주류 미디어 및 기성 지식인들의 수사학은 자기네 정책을 옹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명분으로서 보편주의에 호소하는 연사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이 ‘타자들’ 곧 비유럽세계의 국가 및 더 가난하고 ‘발전이 덜 된’ 국가의 국민들과 관련된 정책에 관해 말할 때 특히나 그러하다. 어조는 종종 독선적이며 허세로 가득 차 있고 오만하지만, 정책들은 **항상 보편적인 가치와 진실을 반영하는 것처럼 제시된다.**

이러한 보편주의에 대한 호소는 세 가지 주된 형태를 띤다. 첫 번째는 범유럽세계의 지도자들이 추구하는 정책들이 **‘인권’을 옹호하고 ‘민주주의’라 불리는 어떤 것을 증진한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는 문명의 충돌이라는 전문용어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항상 ‘서구’ 문명이 보편적 가치와 진리에 기반한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문명보다 우월하다고 전제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장에 관한 엄정한 사실을 강조하는 것인데, 이는 신자유주의적 경제법칙을 수용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라는 논리다(윌러스틴 2008, 7-8, 필자 강조).

냉전의 과정에서 인권에 대한 논의는 보편적 인권이 ‘무엇’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누구’에게 적용되는가라는 문제의식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가속화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과정에서 ‘정치적인 것’이 실종되면서 ‘누구’의 문제는 또 다시 ‘어떻게’라는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 ‘무엇이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라는 인권에 대한 세 가지 문제의식은 서로 중첩되어 있으며 어느 하나로 환원될 수 없다. 윌러스틴의 지적은 이 세 가지 차원이 서로 얽혀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정치적 민주화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인권과 사회운동을 고찰하는데도 매우 유용한 시각을 제공한다.

II. 앙겔루스 노부스: 거꾸로 된 세상의 인권

에두아르도 갈레아노는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지 꼭 반세기가 지난 1998년에 출판한 책 『거꾸로 된 세상의 학교』(*Patas Arriba: La Escuela del Mundo Al Revés*, 2004)에서 라틴아메리카를 중심으로 전세계의 인권 실태를 고발하고 있다. 갈레아노가 풍자하는 거꾸로 된 세상의 학교의 교과 과정은 “불의”와 “인종차별주의와 남성우월주의”라는 기본 과정을 거쳐, 본 과정에서는 “공포에 대한 강의”를 통해 공포를 가르치고 학생들을 길들인다. 실용 과정인 “윤리학 강의”에서는 “친구 사귀기와 성공하기”를, 상급 과정에서는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는 “불처벌”을 가르친다. 거꾸로 된 세상의 학교의 마지막 과정은 집중 과정으로 “소통 불능”을 배움으로써 “고독의 교육학”으로 완결된다. 갈레아노가 묘사하는 거꾸로 된 세상에서 우리는 그저 창밖을 내다보는 것만으로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가 될 수 있다. 비유하자면 “세계인권선언”이 공포된 지 50년이 지난 뒤에 거꾸로 된 세상의 인권은 앙겔루스 노부스의 모습을 닮았다.

파울 클레(Paul Klee)의 그림이 있다. 앙겔루스 노부스(Angelus Novus)라고 하는 천사 하나가 그려져 있다. 마치 그의 시선이 응시하는 곳으로부터 떨어지려고 하는 듯한 모습으로. 그의 눈은 찢어졌고, 입은 벌어져 있으며, 그의 날개는 활짝 펼쳐져 있다. 역사의 천사는 아마 이런 모습이라. 그의 몸은 과거를 향하고 있다. 거기에서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 눈앞에 제 모습을 드러내고, 그 속에서 그는 단 하나의 파국만을 본다. 끊임없이 폐허 위에 폐허를 쌓아 가며 그 폐허들을 천사의 발 앞에 내던지며 펼쳐지는 파국을. 아마 그는 그 자리에 머물러 죽은 자를 깨우고, 패배한 자들을 한데 모으고 싶은 모양이다. 하지만 한 줄기 난폭한 바람이 파라다이스로부터 불어와 그의 날개에 와 부딪치고, 이 바람이 너무나 강하여 천사는 날개를 접을 수가 없다. 이 난폭한 바람이 천사를 끊임없이 그가 등을 돌린 미래로 날려 보내고, 그 동안 그의 눈앞에서 폐허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만 간다. 우리가 ‘진보’라 부르는 것은 바로 이 폭풍이라(진중권 2003, 196, 재인용).

클레의 그림에서 역사의 천사 앙겔루스 노부스는 폐허 위에 폐허

를 쌓아 가는 과국의 현실 앞에서 그의 몸을 과거로 향한 채 미래에 등을 돌리고 있다. 그리고 날개를 펼친 채 “죽은 자들을 깨우고 패배한 자들을 한데 모아” 파라다이스를 향해 날아가려고 한다. 그러나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것은 폐허 더미이고, 앙겔루스 노부스는 입을 벌리고, 찌진 눈으로 과국의 현실을 응시한 채, 알 수 없는 등 뒤의 미래로 밀려 갈 뿐이다. 날아오르지도 못하는 날개를 활짝 펼친 채. 죽은 자들과 패배한 자들로 가득 차 있는 현실이 바로 갈레아노가 고발하는 거꾸로 된 세상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꾸로 된 세상은 현실을 바꾸지 말고 참으라 하고, 과거의 소리를 듣지 말고 잊으라 하며, 상상력으로 미래를 그리지 말고 받아들이라 한다. 그렇게 죄를 범하고, 또 그렇게 죄를 권한다. 거꾸로 된 세상의 범죄학교에서는 무능함, 기억상실, 체념이 수강해야 할 필수과목이다.”(갈레아노 2004, 19).

역사의 천사 앙겔루스 노부스가 곳곳에서 목도하는 것은 두 세계의 탄생이다. 하나는 제국이고 다른 하나는 제4세계이다. 제국이 영토적 경계에 좌우되지 않는 새로운 세계 질서, 즉 탈영토화/재영토화를 원리로 지구 전체를 지배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라면, 제4세계는 그들이 어디에 있건, 배제되고 주변화 된 삶으로 내몰리는 빈곤층의 세계이다(조정환 2002, 61-62). 제국은 어디에나 있고 제4세계 역시 어디에나 있다. 제국의 질서는 빈곤한 제4세계를 끊임없이 창출하면서 유지되는 질서이기 때문이고, 양극화는 제1세계에서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별 불평등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70년대까지 감소세를 보였지만 그 후로는 증가했다. 신자유주의로의 방향 전환이 가장 먼저 일어난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선진국들도 예외가 아니다. 이들 국가에서 1979년과 2001년 사이에 극빈층 20%의 소득은 8%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중산층 20%의 소득은 17%, 부유층 10%의 소득은 69%, 최상위 1%의 소득은 139%나 늘어났다. 그런가 하면 1980년과 2000년 사이에 20개국 가운데 19개국에서 빈곤이 심화되었다. 또 빈곤 한계선 이하에 놓인 가정이 영국에서는 60%, 네덜란드에서는 40% 증가했다. 세계체제의 주변부로 밀려날수록 불평등 격차는 심해지고, 국가 간 격차도 커지게 된다

(르몽드 세계사 2008, 53).

“세계인권선언”의 초안을 작성하는데 기여한 위원들은 인권 개념의 철학적이고 법률적인 기초에 대해 논쟁을 벌였고, 그 논쟁의 중심은 인권 개념의 보편성이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철학적·법률적 토대 위에 세워진 선언의 내용보다 쓰임이었고, 쓰임의 방법론을 결정하는 권력 구조에 대한 통찰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선언의 초안을 작성한 사람들 중에서 철학이나 법학에 조예가 깊지 않았지만 인권의 쓰임에 대해서 고뇌했던 엘리노어 루스벨트 여사가 옳았다.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보편적인 인권이 시작되는가? 작은 지역에서 가정으로 좁혀져 마침내 세계 지도 위의 어느 곳에도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곳으로 좁혀져야 한다. 이런 곳은 모든 남성과 여성 그리고 아동이 차별 없이 동등한 정의, 동등한 기회, 동등한 존엄을 추구하는 곳이다. 이러한 곳에서 권리가 의미를 갖지 못한다면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권리는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다(글렌 존슨 2002, 84, 재인용).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지 반 세기가 지난 지금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인권의 발전과 역사적 계기가 세대 개념으로 순차적으로 진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이고, 보편적 인권 개념의 유럽 기원설도 옳지 않다는 것이다. 1세대 인권인 자유권은 지극히 개인적인 세계에 갇혀 2세대 인권인 평등권을 억압하고 제3세대 인권인 문화권과 단절되고 있다.2)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가속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이러한 현상은 더욱 확실해졌다.

2) 정치조직의 관점에서 볼 때, 명시적이건 암묵적이건 간에 사회는 세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다. 첫 번째는 그리스인들이 오이코스(Oikos)라 불렀던 가정이나 사생활이다. 두 번째는 아고라(Agora), 즉 개인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며, 단체나 기업을 형성하기도 하고, 개인이나 정부의 보조를 받는 극단이 공연을 하기도 하는 사적이고 공적인 장소이다. 이것은 18세기 이래 시민사회라고 부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에클레시아(Ecclesia), 즉 공공의 장소이다. 이곳은 정치권력이 행사되고 존재하고 또 물러나는 곳이다. 위의 세 가지 영역의 관계는 고정적이고 경직된 방식으로 형성되어서는 안 되며, 유동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자유주의는 공적인 분야와 사적인 분야를 완전히 구분 지으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카스토리아디스 2001, 36).

III. 정치적 민주화 이후 라틴아메리카 인권 정치의 실상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외채위기가 발발하기 전까지 라틴아메리카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수입대체산업화(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 이르러 수입대체산업화가 발전모델로서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세계경제와 더 긴밀한 통합을 꾀하기 시작했다. 근대화를 국가적 목표로 내세운 경제구조의 변화들은 대부분 권위주의 독재정권을 통해 추진되었다. 중심부와 주변부의 경제사회적 상황을 구분하지 않고 그 당시를 휩쓸었던 ‘발전주의 신화’는 1960년대 중반부터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허쉬버그/로젠 2008; 뒤메닐/레비 2006; 백승욱 2006). 저금리의 차관을 초국적 은행으로부터 빌려 산업화를 추진했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국제 소비자 가격의 전체적인 하락과 국제 이자율 상승으로 외채 규모가 급상승하게 되면서 큰 타격을 받았다. 수출시장은 위축되었고 금리인상은 외채위기의 도화선이 되었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 경제위기는 역설적으로 정치적 민주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다. 독재정권에서 민주주의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정치적 민주화가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과 함께 진행되었다는 것이다(로빈슨 2008, 142; 빌라스 2008, 325). 여기에 덧붙여 “시장 민주주의”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 경제개혁과 정치적 민주화가 병행된 것은 경제 세계화의 기능적 요청 사항이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자유시장과 민주주의의 촉진”은 새로운 세계적 생산·금융 체계의 자유로운 작동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형성하여 세계 자본주의를 위해 전 세계를 이용 가능하고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을 의도한다. [...] 이 다국적 계획은 분명히 정치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남반구의 권위주의와 독재를 지지하던 미국 정치, 그리고 여타 자본주의 권력이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것으로 변화한 것이 이러한 정치적 요소에 해당한다. 경제적 요소가 세계를 자본이 이용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면, 정치적 요소는 자본을 위해 세계를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지배의 새로운 수단, 새로운 정치 제도, 더욱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계적 환경을 달성하기 위한 다국적 사회 통제 형태를 개발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

(로빈슨 2008, 144-145).

자유시장을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민주주의의 촉진”은 실상은 엘리트에 의한 다두제(polyarchy)의 촉진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민중이 주인이 되는 고전적 의미의 민주주의를 뜻하는 것이 아니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은 냉전시기에 자유주의 이념을 확장하기 위해 독재정권을 지원했다면, 1970년대 이후 자본주의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자본의 반격은 국제적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독재정권에서 민주정권으로 대리인을 바꾼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라틴아메리카의 자본가 계급과 초국적 자본의 투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때 대리인을 바꾸는 구실로 사용된 것이 ‘민주주의 촉진과 인권 신장’이었다. 이것은 개발 독재를 통한 근대화에서 정치적 민주화를 통한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경험한 공통된 현상이었다. 예를 들어, 1970년 칠레의 살바도르 아옌데가 민주적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미국은 아일윈(Patricio Aylwin)이 이끌던 기독교민주당과 중도 및 우파 세력들과 결탁하여 아옌데 정권을 흔들어들었고 그것의 귀결점은 피노체트가 이끈 군사 쿠데타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돌연히 경로를 변경하여 군사 쿠데타에 공공연하게 참여했던 아일윈을 다시 저항 세력으로 등장시켜 피노체트를 실각시키고 대통령이 되도록 지원했을 때도 미국이 사용한 것이 인권 정책이었다.

남미에서 외채위기의 시기이자 권위주의 정권이 온건해진 시기인 레이건 행정부 동안에는 범 지향적인 인권 단체들이 북미와 남미에서 번성했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휴먼라이트워치(Human Right Watch)가 변화를 겪고 있던 국가권력의 장(場)에 반응하면서 앰네스티의 리더십에 도전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개발했고 주도적인 국제 인권운동 기관으로 부상했다(드잘레이/가스 2007, 10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의 기류 속에서 경제발전을 강조한 강한 국가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따라 조직되는 국가로 이행하는 시

기에 민주주의와 인권은 자본·권력의 명령에 복무하는 프로크루스테스(Procrustes)의 침대였다. 갈레아노가 고발하듯이, 미국이 미국에서 훈련받은 콘트라 반군을 침투시켜 산디니스타 정권의 니카라과를 공격한 것은 니카라과가 민주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쿠바가 50년 동안 철저히 경제봉쇄를 당하면서 미국에게 문둥이 취급을 당하는 것도 쿠바가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잘 단결되고 가장 덜 부패한 사회를 건설한 죄 때문이었다(갈레아노 2004, 329-332).³⁾

민주주의와 인권을 앞세운 신자유주의 개혁과 이행은 사회적·경제적 조직 변화에 개입하여 사회계급 및 여타 사회적 행위자들 사이의 권력관계를 실질적으로 변화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특정한 사회집단, 즉 자본가 계급의 복귀를 의미하며, 이들의 이익에 따라 위기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사회집단이나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든 특정 사회집단의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다하는 것 [...] 위기의 기간 동안이나 그 이후에 나타나는 실업 문제에는 무관심하며, 심지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임금요구의 억제, 사회적 보호 수준의 저하, 그리고 일자리 보장의 축소에 의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 세계에 신자유주의 질서를 전면화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파괴적이었으며 현재도 그렇다.”(뒤메닐/레비 2006, 32-33).

대의민주주의가 재구축되는 과정에서 ‘불만족스러운 민주주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가 단순히 제도적·절차적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신자유주의 경제개혁 이후에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연구와 보고서들은

3) 라틴아메리카 혁명 정권에 대한 평가는 왜곡된 경우가 많다. 중첩된 원인들을 외면하고 결과만 보기 때문이다. “산디니스타 혁명은 전쟁의 와중에서 50만 명의 국민을 문맹에서 벗어나게 했고, 유아사망률을 3분의 1로 낮추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연대의 힘과 정의의 소명 의식을 불어넣었다. 그것이 바로 니카라과의 도전이었고, 그것이 바로 저주였다. [...] 쿠바가 처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혁명이 이룬 일부 과업은 아직도 견제해서 쿠바의 가장 철천지원수조차도 인정할 정도인데, 특히 교육과 보건 부문이 튼실하다. 유아사망률을 예로 들어 보면, 워싱턴에서 사망하는 아이들의 평균 절반에 달하는 아이들만 쿠바 전체에서 사망할 정도다. [...] 쿠바에서 방금 도착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 “모자라지 않는 게 없어. 그건 맞아. 그래도 자존심만은 차고도 넘쳐, 수혈을 할 정도라니까.””(329-331).

대의민주주의의 향상과 경제적 빈곤과 불평등의 증가라는 역설적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역설적 결과는 “불가피한 구조조정”임을 내세운 개혁이 “최소한 단기적으로 아래로부터 위로 소득을 재분배하고,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의 생활수준을 더욱 힘들게 하는가 하면, 민중과 통치자 사이에 체결된 모든 협약을 파기한다는 사실”(허쉬버그/로젠 2008, 18)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말해, 경제성장의 과실을 “흘러넘치게”(trickle down effect) 한다는 신자유주의의 약속은 “밑바닥을 향한 경주”였을 뿐이다.

<표 1>

| 개혁과 현실 | | | |
|--------------------|-----------|-----------|-----------|
| 연 도 | 1981-1990 | 1991-1997 | 1998-2003 |
| 경 제 개 혁 지 표(1) | 0.58 | 0.79 | 0.83 |
| 선 거 민 주 주 의 지 표(1) | 0.64 | 0.87 | 0.92 |
| 1인당국내총생산 실질성장률(3) | 0.7% | 0.6% | 1.2% |
| 빈 곤(2) | 46.0 | 42.8 | 42.8 |
| 극 빈(2) | 20.4 | 18.3 | 17.7 |
| 지 니 계 수(2) | 0.554 | 0.574 | 0.577 |
| 도 시 실 업(1) | 8.4 | 8.8 | 10.4 |

(1) 단순평균 (2) 전체 인구 대비 백분율 (3) 해당기간 평균

※ 경제개혁지표는 다섯 개의 구성요소(대외무역정책, 세금정책, 금융정책, 민영화, 자본계정자유화)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지표는 0에서 1의 수로 표시하며, 1에 가까울수록 시장친화적 개혁이 강한 것을 뜻한다.

<표 2>

| 민주주의, 빈곤, 불평등 | | | | |
|---------------|---------|-----------|---------|------------|
| 지 역 | 선거참여(1) | 불평등(2) | 빈곤 | 1인당국내총생산 |
| 라틴아메리카 | 62.7 | 0.552(3) | 42.8(6) | 3,792(9) |
| 유 럽 | 73.6 | 0.290(4) | 15.0(7) | 22,600(10) |
| 미 국 | 43.3 | 0.344(5) | 11.7(8) | 36,100 |
| 동 유 럽 | | 0.328(11) | | |
| 아 시 아 | | 0.412(12) | | |
| 아 프 리 카 | | 0.450(13) | | |

(1) 1990-2000년 유권자 대비 투표자의 비율

(2) 지니계수 수치가 높을수록 불평등 정도가 높음

- (3) 1990년대 단순평균, Perry et al.(2004, 57)
- (4) 2002년 12월, Eurostat, PCM-BDU
- (5)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사회지표 및 표
- (6) 라틴아메리카경제개발위원회(CEPAL), 2002b. 전체 인구 대비 비율
- (7) 2002년 12월, Eurostat, PCM-BDU
- (8) 미국 센서스국 2001년
- (9) 2003년 CEPAL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작성(통용달러 기준)
- (10) 서유럽(EU15)과 미국의 2001년 1인당 국내총생산, OECD(통용달러 기준)
- (11-13) 1990년대 단순평균, Perry et al.(2004, 1)

표(UNDP 2004)에서 볼 수 있듯이, 8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 경제 개혁지표와 1인당 국내총생산의 실질 상승률은 꾸준히 상승했고 선 거민주주의지표도 상승했지만 빈곤층과 극빈층은 거의 감소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니계수와 도시실업은 증가하였다. 여기에 주목해야 할 사항을 한 가지 더 덧붙여야 한다. “라틴아메리카의 고유한 특징은 전 세계 어떤 나라와 비교해보더라도 인구 중 최상위 10%가 전체 소득 중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이다. 전체 소득 중 최상위 10%가 거의 절반인 48%를 차지하는데, 선진국의 경우 29.1%이다. 실제로 지니계수 계측에서 최상위 10%를 제외한다면, 라틴아메리카와 미국의 소득 불평등은 각각 0.353과 0.386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된다.”(레이가다스 2008, 173).⁴⁾

냉전시기에 국가권력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주의 진영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되었던 민주주의와 인권은⁵⁾ 경제개혁의 과정에서 자본권력을 보호하는 안전판 기능으로 전락했다. 바꿔 말하면, 정치적 시민권 부문에 주어진 민주주의와 인권은 경제적 평등을 포기하는 대가로 주어진 ‘저강도 민주주의’일 뿐이다. ‘저강도 민

4) 또 다른 보고서는 라틴아메리카의 심각한 소득 불평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1998년 라틴아메리카 소득이 최상위인 5% 인구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소득이 2배나 많은 반면, 최하위 30%는 전체 소득의 7.5%로 연명하는데, 이는 선진국의 하위 30%의 소득 비율인 60%와 비교할 때 턱없이 낮다.”(Portes and Hoffman 2003, 41-82. 빌라스 2008, 326에서 재인용).

5) 라틴아메리카를 예로 든다면 무장 혁명을 통해 정권을 잡은 니카라과 산디니스따가 니카라과의 대서양 연안 지역에서 사회주의적 발전을 계획하면서 메스끼또 원주민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갈등을 미국의 CIA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앞세워 산디니스따를 역공하는 계기로 삼았다.

주주의'란 앞서 언급한 국내의 엘리트 동맹에 의한 다두제를 뜻하는 것이며, 대중이 주도하는 민주화 요구를 흡수하고 무력화하려는 “선제 개혁”을 의미한다.⁶⁾ “선제 개혁”의 목적은 각국의 정치 체계를 신자유주의 경제 구조에 맞게 고쳐 일정 부분 대중의 요구와 불만을 흡수함으로써 직접적·강압적 방식이 아니라 합의를 통한 지배를 강화하는 것이다.

1970년대 말까지 권위주의 체제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엄청난 위기를 맞이했다. 민주화와 인권을 요구하는 다수 대중의 운동은 독재와 엘리트 기반 사회 질서를 위협하여 붕괴시켰다. 1979년 니카라과가 그랬고, 아이티,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등지에서도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다. [...] “선제 개혁”은 반독재 투쟁을 통한 더 큰 변화를 막기 위해 사전에 독재정권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미국의 개입은 정책적 원조 프로그램과 은밀한 혹은 직접적인 군사작전, 경제적 원조 또는 제재, 공식 외교, 정부 간 프로그램 등을 종합한 것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 나라를 휩쓸며 권력을 장악한, 그리고 각 민족 국가를 새로운 세계 질서에 통합시킨 다국적 엘리트의 지역적 분파와 연계를 맺거나 이들이 권력을 장악하도록 도왔다. 자본주의적 세계화로 이익을 얻은 엘리트 집단이 이런 방식으로 다시 핵심 정치 기구를 통제하게 되었다(로빈슨 2008, 157).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선제 개혁은 라틴아메리카를 지배하던 야만적이고 부조리한 구조에 대항하는 대중 운동을 약화시킴으로써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사회경제 구조를 그대로 놔둔 채 대의정치 체계만 변화시키는 ‘저강도 민주주의’를 선물했다. 이것을 그람시 사유의 핵심적인 개념인 헤게모니 이론으로 설명하면 지배계급이 반대 세력의 수동적이거나 능동적인 ‘동의’를 통해 ‘지배’를 실천하는 전략인 셈이다(멘티니스 2009, 99-100). 다시 말해,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윤리정치적인 동의를 앞세워 견고한 경제적 지배를 구축한 것이다. 그

6) “선제 개혁”은 미국의 전 국무부 장관이었던 키신저와 사이러스 밴스가 대중적인 운동을 억누르기 위해 얼마간 실제로 정치를 개혁하는 것을 지칭한 말이다(Kissinger and Vance 1988). 키신저는 1970년 민주적 선거를 통해 살바도르 아옌데가 칠레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나는 자국민들의 무책임 때문에 공산주의가 되려는 국가 앞에서 우리가 팔짱 끼고 수수방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유명한 말도 남겼다(로빈슨 2008, 141, 재인용).

러나 ‘저강도 민주주의’는 사회 정의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켰다. 갈레아노가 지적하듯이, “라틴아메리카의 민주주의는 외채 상황과 범죄 망각이라는 선고를 받고 소생했다. 마치 민선 정부가 군부의 노력에 고마워하는 것 같았다. 군부의 공포정치는 유리한 해외투자 환경을 조성했고, 이어 뻘뻘스럽게도 나라를 헐값에 팔아 먹을 수 있는 길을 잘 닦아 놓았다. 국가 주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노동권을 유린하고, 공익사업이 와해된 것은 바로 민주주의 체제하에서였다. 1980년대에 민권을 회복한 사회는 최상의 기력을 이미 상실한 상태였고, 거짓과 공포에서 살아남는 데 익숙해져 있었으며, 너무도 낙담하고 쇠약해져서 창조적 활력을 필요로 했다. 창조적 활력은 민주주의가 약속한 것이긴 하지만, 줄 수도 없었고 줄 방법도 몰랐다.”(갈레아노 2004, 219).

IV. ‘고강도 민주주의’와 라틴아메리카 대안사회운동

냉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세계인권선언”에 포함된 인간의 권리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유린당했고,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는 시

7) 정치적 민주화 과정에 자유시장 개혁을 도입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이 ‘인권 독트린’이라면 군부 독재정권 시기에 사용된 방법은 “쇼크 독트린”이다. 나오미 클라인은 최근에 출판된 책 『쇼크 독트린』에서 자유시장의 역사는 쇼크 속에서 씌어졌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사회적 저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충격 요법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나오미 클라인은 1973년 피노체트 쿠데타가 첫 번째 충격 요법이었으며 그 조연자가 밀턴 프리드먼이었다고 말한다. 피노체트의 과격한 쿠데타의 충격과 하이퍼인플레이션에 의한 정신적 충격을 이용해 프리드먼은 피노체트에게 세 급 감면, 자유무역, 서비스 분야의 민영화, 사회지출 삭감, 탈규제화 등의 신속한 경제 변혁을 조언했다는 것이다. 나오미 클라인은 이를 “재난 자본주의”(disaster capitalism)라고 부른다(2008, 15). “쇼크 독트린의 시각에서 보면 지난 30년은 우리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 흔히 우리는 악명 높은 인권 유린은 반민주적인 체제가 저지른 가학적 행위로만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대중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용되거나, 과격한 자유시장 개혁의 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다. 1970년대 아르헨티나 군부체제에서 일어난 3만 명의 실종은 시카고학과 실험의 핵심이었다. 칠레에서도 마찬가지로 공포는 경제 변혁의 파트너였다. 1989년 중국은 천안문 광장 학살과 이후 수만 명의 체포를 통해 수출자유지대를 마음껏 확대할 수 있었다. [...] 영국의 마가렛 대처는 1982년 포클랜드 전쟁을 통해 그 같은 목적을 달성했다.”(19-20).

장 민주주의에 의해 유린당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을 네 개의 주량이 지탱하는 지붕으로 이루어진 유기적 구조라는 비유적 표현으로 카생이 그토록 역설했던 인권의 불가분성(indivisibility)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 권리로 찢겨졌고 공동체적 유대를 지향하는 제3세대 인권은 무시되었다. 자본주의가 자유의 이름으로 평등을 희생시켰다면 사회주의는 평등의 이름으로 자유를 희생시켰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고 공산주의 체제도 무너졌다. 그 결과, 그나마 유지되었던 자유와 평등 사이의 균형이 급격히 상실되었다.

새로운 세계경제로의 통합을 의미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탈규제, 자유화, 민영화, 긴축 재정, 노동의 유연화 등, 이제는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결과는 빈부 격차 혹은 사회적 양극화라는 공통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로서 자본이 정치적 매듭으로부터 풀려난 데서 연유한다. 사회적 양극화는 공적 영역의 부문에서 국가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시장에 떠넘기면서 국가적·사회적·개인적 영역을 휩쓸고 있는 우승열패의 원리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20년 혹은 30년 전만 하더라도 빈곤은 불의의 산물이었다. 좌파는 그것을 고발했고, 중도파는 인정했으며, 우파는 아주 드물게 부정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너무도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것을 바꿔 놓았다. 지금 빈곤은 무능력에 대한 정당한 벌이다.”(갈레아노 2004, 43). 따라서 평등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능력한 인간에 대한 자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최근 들어 부쩍 자주 접하게 되는 ‘소수자’라는 용어가 민중이라는 용어를 대신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여성, 장애인, 아동,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의미하는 소수자(少數者)는 숫자가 적은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권력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다수자와 소수자의 문제는 개인에 대한 본질적 접근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로 접근해야 한다. 더구나 21세기에 들어와 세계화가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케인스주의-베스트

팔렌적인 틀'(Keynesian-Westphalian frame)⁸⁾을 벗어나 탈영토화가 빈번해지고 있는 반면에, 국가의 역할은 갈수록 축소되는 상황에서 빈곤의 문제를 개인적 능력의 문제로 돌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199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사회운동이 '고강도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투쟁으로 변화한 것은 이런 맥락이다. 2000년에 '라틴아메리카 사회과학협회'(Consejo Latinoamericano de Ciencias Sociales, CLACSO)의 하부 기관으로 설립된 '라틴아메리카 사회전망대'(Observatorio Social de América Latina, OSAL)의 조사에 따르면 2000년 5-8월의 기간 동안에 709건이었던 사회적 소요와 분쟁은 2002년 같은 기간 동안에 180%가 증가하여 2,232건에 이르렀으며 그 뒤로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⁹⁾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발효되던 1994년 새해 첫날 발발한 멕시코 사빠띠스따(zapatista) 봉기는 이러한 사회적 저항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개발독재와 정치적 민주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의 목표는 국가에 민중들의 권리를 요구하거나, 정당이나 다른 사회 분야와 동맹을 수립하거나, 사회운동의 범위를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하는 것 등이었다. 따라서 사회운동의 밑바닥에는 '케인스주의-베스트팔렌적인 틀'에서 형성된 국민국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사회운동을 구성하는 저항의 주체와 저항의 대상 모두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¹⁰⁾ 저항의 주체 쪽에서 바라보면, 근대화를 최상의 가치로 내세운 개발독재 시대에는 국가가 주도한 "시민도 주체도 없는 해방"(emancipación sin subjetividad ni

8) '케인스주의-베스트팔렌적인 틀'이란 전후 민주주의적인 복지국가가 한창이던 시기(대략 1945년에서 1970년대까지)에 이루어진 정의 논쟁의 민족국가적-영토적 토대를 가리킨다. 제1세계 국가들이 베스트팔렌 조약을 주권적 영토국가들을 상호 인정하는 체계인양 세계를 지도화했다는 비판이 존재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제3세계의 시각에서는 베스트팔렌적 전제들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졌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반식민주의들 대다수가 그들 자신의 독립적인 베스트팔렌적 국가를 성취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프레이저 2009, 437-438).

9) <http://bibliotecavirtual.clacso.org.ar/ar/libros/osal/osal11/introcronos.pdf>

10) 20세기 사회운동은 민족국가라는 일국(一國)의 틀을 벗어나서 생각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사회운동이 국가 간 체계와 맞물려 있는 세계경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는데 기여를 한 것이 세계체제 분석이며 가시화되고 있는 초국가적 현상으로 더 뚜렷해지고 있다.

ciudadanía)을 전면에 내세웠고, 정치적 민주화 시기에는 “주체 없는 시민의 해방”(emancipación con ciudadanía y sin subjetividad)이 우세했다면, 90년대 이후 새롭게 등장한 사회운동은 “주체의 해방”(emancipación con subjetividad)을 요구한다(Santos 2001). 이런 맥락에서, 무기력한 국가와 강력한 초국적 기업 사이에서 사회운동은 자율주의적 반(反)자본주의의 양상을 보인다. 이와 함께 저항의 대상도 국민국가에서 그 뒤편의 민간자본이나 초국적 자본으로 바뀌고 있다.

산체스 데 로사다 대통령의 사임으로 귀결된 볼리비아의 ‘가스 전쟁’(2003년)은 꼬차밤바시(市)의 ‘물 전쟁’(2000년)으로 시작된 사회운동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차빠레 지역의 ‘코카재배운동’으로 연결되었다. 새 대통령 까를로스 메사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폐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고 그 때문에 2005년 6월 또 다시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그 뒤 치러진 선거에서 새로운 경제정책과 석유와 가스의 국유화를 공약으로 내건 원주민 출신 에보 모랄레스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또한 자밀 마우아드 정권을 붕괴시킨 에콰도르의 민중봉기(2000년)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저항하는 사회운동의 결과였으며 운동의 거점은 ‘에콰도르 전국원주민연맹’(CONAIE)이었다. 그 이후 대통령으로 선출된 루시오 구띠에레스도 또 다시 민중의 저항으로 2005년 4월 정권에서 물러났다. 아르헨티나에서는 2001년 12월 경제위기 이후 해고 노동자들이 공공분야의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거리 시위, 공장 검거, 민중의회 수립 등 강력한 민중운동을 통해 델라 루아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렸다. 그리고 브라질 대선에서 노동당 출신의 룰라 다 실바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지지 세력의 밑바탕에는 무(無)토지 농민운동(MST)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민중운동이 있다. 또한 꾸바스 그라우 대통령의 실각(1999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파라과이 농민운동은 후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계속 저항했으며 마침내 2008년 전직 가톨릭 사제이자 중도좌파 정치인인 페르난도 루고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페루에서도 ‘지역민중전선’(Frente Cívico Regional)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힌 후지모리 대통령이 권좌에서 물러났고 그 뒤를 이은 토레도 대통령의 계속된

신자유주의 민영화 정책이 사회적 분쟁의 요인이 되면서 역시 중도 좌파인 알랑 가르시아 전 대통령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이러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변화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요구가 사회경제적인 재분배와 법적·문화적 인정이라는 면에서 실질적 내용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틀(frame)까지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재분배와 인정에 대한 실질적 내용이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일차적 층위의 물음들(first-order questions of substance)¹¹⁾과 관계 있다면, 이차적 층위의 물음들은 일차적 층위의 물음들이 어떤 틀 안에서 적절히 고려되고 의제화될 수 있는가, 적절한 분배나 상호 인정을 받아야 하는 사회적 주체들은 누구인가? 등과 관계가 있다. 더 나아가 메타적 수준에 해당하는 이차적 층위의 물음들은 분배의 경제적 차원과 인정의 문화적 차원을 포괄하는 대의/표현(representation)의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의 차원과 관련되어 있다(프레이저 2009, 441-442). 즉 정치가 경제나 문화처럼 사회를 구성하는 체계 가운데 하나를 가리킨다면, 정치적인 것은 정치, 경제, 문화와 같은 체계로 구성된 사회에 선행하는, 사회 자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의미한다(현민 2007, 393).

이런 맥락에서 라틴아메리카 대안사회운동은 대안(alternativas)을 찾는 것이 아니라 “대안에 대한 대안적 사유”(pensamiento alternativo de alternativas)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 대안에 대한 대안적 사유란 유럽의 근대적 사유가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현실에 대한 인식이며 “남쪽의 인식론”(Epistemología del Sur)이다(Santos 2009). 멕시코의 사빠띠스따, 브라질의 무(無)토지 농민, 과테말라의 원주민, 볼리비아의 코카 재배 농민들과 수자원 민영화 반대 운동가들, 에콰도르의 전국원주민연맹, 아르헨티나의 실직노동자(piqueteros) 등 1990년대 중반 이후 새롭게 등장한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의 주체들은 사회 자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토대로 자리

11) 일차적 층위의 물음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은 어느 정도까지 용인될 수 있는가, 얼마만큼의 재분배가 필요한가, 어떤 분배 정의의 원칙에 따라 재분배할 것인가, 과연 무엇이 동등한 존중을 구성하는가, 어떤 종류의 차이들이 공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수단과 방법에 의해 차이들이 공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잡은 기본 틀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불평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빈곤의 회복력뿐만 아니라 극단적 부의 지속성을 설명해야만 한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이러한 불평등이 역사적 시기(식민주의 시절부터 현재까지), 각기 다른 경제 발전 모델(수출 기반 모델부터 수입대체산업화, 신자유주의까지), 각기 다른 정치체제 유형(포퓰리즘, 권위주의, 민주주의)을 통틀어 지속되었다는 사실은 이것이 사회제도 전반에 스며 있는 구조적 특징이며, 따라서 특별한 주목을 요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러한 지역적 특이성을 설명하는 단일한 원인은 없다. 이는 권력의 집중과 경제, 정치, 사회, 문화를 가로질러 축적된 것의 결과이다(레이가다스 2008, 175).

주체의 해방을 목표로 하는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은 분배와 인정의 표층적 차원을 넘어서서 심층적 차원의 ‘잘못된 틀 구성’(misframing)을 재구성하려고 시도한다. 이것은 유럽중심적 근대성을 외부에서 사유하는 것, 즉 “외부에 의한 사유”를 뜻한다(이진경 2009, 169).¹²⁾ 왜냐하면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한나 아렌트가 지적한 것처럼,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의 주체들은 오랫동안 ‘정치적인 것’으로부터 배제됨으로써, “권리를 가질 권리”를 박탈당했기 때문이다(2006, 493-523). 틀 바깥으로 배제된 사람들은 자선이나 자비심의 대상일 뿐 사회에 참여하고 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없다. 따라서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은 사회적 주체로서 문화적 차이를 인정받을 수도 없다. 이런 맥락에서, 잘못된 틀 구성을 대의/표현의 차원에서 정의하면 “대의부재/표현차단”이라고 할 수 있다(프레이저

12) ‘외부에 의한 사유’는 ‘외부에 대한 사유’의 전복이다. 유럽중심적인 근대적 사유는 무엇보다도 주체성의 사유이며 주체성의 사유는 ‘내부성의 사유’다. ‘내부성의 사유’란 인간이 찾아낸 어떤 형상에 불변성과 완전성을 부여하는 자기완결적 사유를 뜻하며, 초월성과 외재성의 형태를 전제할 때조차도 항상-이미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이진경 2009, 40). 따라서 ‘외부에 대한 사유’가 외재성을 내부로 포섭하려는 ‘내부성의 사유’의 한 국면에 불과하다면, ‘외부에 의한 사유’는 ‘내부성의 사유’를 와해시키고, 더 나아가 내부성을 형성하는 구성적(constitutive) 조건에 대한 사유다. ‘외부에 의한 사유’에 따르면 “내부란, 내적인 본질이 없으며 모든 내부는 사실 우연적이고 자의적으로 선택된 외부에 의해 직조된 것이란 뜻에서 **모든 내부는 외부다**라는 말에 동의할 것 같다.”(112). ‘외부에 의한 사유’는 다음에서 논할 “근대/식민 세계체제와 트랜스모더니티”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

2009, 449).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의 주체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원주민, 아프리카계 흑인, 식민지 시기부터 현재까지 토지를 갖지 못한 무토지 농민 등인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위에서 인용한 것처럼, 역사적 시기와 경제 발전 모델 그리고 정치체제 유형에 관계없이 라틴아메리카의 불평등이 지속적이고 견고하게 유지된 이유는 케인스주의-베스트팔렌적인 근대적 국민국가의 틀에서 이들이 시민의 권리를 박탈당한 주체로 존재했기 때문이며,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충격이 국민국가의 틀마저도 무력화시킴으로써 그들을 ‘인간이 아닌 자’(non-person)들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사회운동을 유럽의 신사회운동(New Social Movements)과 구별하여 대안사회운동(Alternative Social Movements)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잘못된 틀 구성에 반대하는 투쟁이며 새로운 틀에 대한 요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럽중심적 관점에서 라틴아메리카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199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이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유럽의 경우, 전후(戰後) 산업화 시기 복지국가의 역할이 (재)분배에 집중되어 있었고, 68혁명 이후 신사회운동과 다문화주의가 출현하면서 무게중심은 정체성의 차이에 대한 인정으로 이동했다. 따라서 신사회운동과 다문화주의는 유럽에서 기원한 근대 문명의 한계와 위기에서 비롯되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시 말해, 신사회운동과 다문화주의는 ‘급진화된 근대성’(radicalized modernity)의 단계에 이른 중심부 국가에서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성찰적 근대성’(reflexive modernity)이라고 부른다(기든스 1991; 벡 2006). 따라서 20세기 후반에도 여전히 계몽주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주변부 제3세계에서는 중요한 대화 상대인 국가에게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사회운동의 목표일뿐이라고 평가한다. 예를 들어, 라클라우와 무페는 제3세계 사회운동의 목표는 외적으로는 제국주의의 침탈에 저항하고 내적으로 억압적이고 중앙집권적 정치권력에서 벗어나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것이며, 이러한 투

쟁의 주체는 민중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은 민주화 투쟁과 민중 투쟁 사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주체들에 의한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Laclau and Mouffe 1985). 이러한 분석은 90년대 이후의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경제적 종속과 국가의 끊임없는 개입은 라틴아메리카가 스스로의 역사를 만들어 나갈 능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것이다(Touraine and Khosrokhavar 2000).

이런 판단의 근거에는 근대성에 대한 유럽중심적 사유가 자리 잡고 있다. 근대적 이성을 바탕으로 한 합리성과 전통의 탈주술화를 특징으로 하는 근대성은 유럽에 기원을 두며 목적론적 발전 사관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달리 말하자면, 유럽중심적 근대성의 특질은 전통과 근대의 불연속성, 즉 근대적 생활양식이 그 이전 시기에 존재했던 전통적 사회 질서와의 단절이다. 그리고 이러한 단절을 기준으로 자율-종속, 선진-후진, 중심-주변, 세계성-국지성 등의 이분법을 적용한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발전주의적 유토피아는 동일성의 원리로 모든 문화적 차이를 위계적으로 배치한다. 이런 맥락에서, 유럽중심주의의 관점에서 세계화는 근대성의 위기나 근대적 사회질서의 해체가 아니라, 근대성의 결과들이 전보다 더 급진화되고 주변부까지 보편화되어가는 총체적 과정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의 사회운동이 근대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V. 근대/식민 자본주의 세계체제와 트랜스모더니티(trans-modernity)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은 경제적 재분배와 법적·문화적 인정에 대한 요구를 넘어서서 대의/표현의 정치적인 것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권리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는 대의/표현의 권리 없이는 재분배도 인정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갈등은 단순히 자본과 노동의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으며 자본과 자연, 개인과 문화적

정체성의 문제에서도 노출되고 있으며, 또한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의 주체들에게 대의/표현의 권리는 근대/식민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출발과 함께 박탈되고 억압된 인간의 존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멕시코 남부 치아빠스 주 라칸도나 정글에서 전쟁을 선포했던 사빠띠스따들의 첫 번째 선언문은 이 점을 명료하게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500년에 걸친 투쟁의 산물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노예제에 반대해 싸웠습니다. 독립 전쟁 때는 스페인에 대해 싸웠고, 그 다음에는 북아메리카 제국주의에 흡수되지 않으려고 싸웠으며, 그 다음에는 우리 헌법을 선포하고 우리 땅에서 프랑스 제국을 쫓아내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개혁법의 정당한 적용을 거부하는 포르피리오 디아스 독재정권에 맞서 싸웠으며, 여기서 우리는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인 비야와 사파타 같은 지도자를 탄생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우리를 총알받이로 사용해 우리나라의 부를 약탈해 가려는 세력에 의해 가장 기초적인 것조차 거부당했습니다. 저들은 우리가 아무 것도, 정말 아무 것도 가진 게 없어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교육은 물론 우리 머리를 덮을 만한 반듯한 지붕도, 갈아 먹을 땅도, 일자리도, 의료시설도, 식량도 없을뿐더러, 우리의 정치 대표자를 자유롭게 민주적으로 선출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외국인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도 없고, 우리 자신과 우리 아이들을 위한 평화와 정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합니다. “이제 그만!”이라고(마르코스 2002, 89-90).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멕시코 사빠띠스따 봉기는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던 1994년 1월 1일 발발했다. 봉기의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오랫동안 유지해왔고 멕시코 혁명헌법에도 보장되었던 공동토지제도(ejido)가 자유무역협정으로 붕괴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조국이 아득하게 망각해버린 모퉁이”(박정훈 외 2004, 29)에 방치되었던 원주민들의 봉기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문화적·정치적·사회적으로 잘못된 틀 구성에 대한 항거였다. 그리고 이 잘못된 틀이 구성된 것은 아메리카가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한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통상적으로 이성과 계몽을 시대정신으로 하는 근대는 18세기 계몽

주의 시기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지하듯이 계몽이란 인간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는 비판적 도구인 이성을 사용하여 미성숙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은 18세기 유럽에서 시작되었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이성과 계몽의 프로젝트로서의 근대는 18세기 서구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고유한 믿음, 즉 인간의 이성이 곧 빛이라는 믿음에서 시작되었다. 데카르트에서 베이컨에 이르기까지 인간에 대한 믿음, 이성에 대한 믿음, 과학에 대한 믿음은 인간과 자연, 그리고 우주에 대한 인간의 이해를 규정짓는 경험의 가능조건들이었다.”(고봉준 2007, 441-442). 따라서 보편적 인권이 이 시기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생각은 크게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나 시대적 패러다임으로서의 근대성(modernity)의 개념은 근대 세계체제(modern world-system)와는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근대성이 18세기 서구 계몽주의로부터 시작되었다면 근대 세계체제는 15세기 말에 시작되었다(Braudel 1995; Arrighi 1994; 윌러스틴 1999). 즉 아메리카 정복을 계기로 지중해 상권이 대서양 상권으로 확장되면서 등장한 세계경제와 더불어 근대 세계체제는 시작되었다.

근대 세계체제는 장기(長期) 16세기에 탄생했다. 지리사회적(geosocial) 구성물인 아메리카도 장기 16세기에 탄생했다. 지리사회적 실체인 아메리카의 창조는 근대 세계체제의 구성적(constitutive) 행위였다. 즉 아메리카는 이미 존재하고 있던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편입된 것이 아니었다. 아메리카가 없었다면 자본주의 세계경제도 존재할 수 없었다(Mignolo 2000, 53, 재인용).

윌러스틴의 세계체제 분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페르낭 브로델의 장기 지속(longue durée)의 관점에서 볼 때 근대성은 근대 세계체제에 포함된다. 르네상스→종교개혁→프랑스혁명→산업혁명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사건들은 자본주의 근대 세계체제의 마디들이 형성되는 계기들이다. 이런 맥락에서, 근대 세계체제가 첫 번째 근대성이었다면 계몽주의 근대성은 두 번째 근대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근대성을 근대 세계체제 분석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계

몽주의 근대성이 은폐했던 식민성(coloniality)의 역사가 드러난다는 것이다.

아메리카에서 금은이 발견된 것, 원주민들이 광산에서 멸종되고 노예화되고 매몰된 것, 동인도 제도의 정복과 약탈이 시작된 것, 아프리카가 상업적인 흑인 사냥터로 바뀐 것 등이 자본주의적 생산 시대의 장밋빛 새벽을 알려주었다. 이 목가적인 과정들이 원초적 축적의 주요한 계기들이다.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전 지구를 무대로 한 유럽 국가들의 교역전쟁이 시작된다(월러스틴 1999, 제사[題辭], 재인용).

사빠띠스따 봉기가 500년에 걸친 투쟁의 산물이라고 한 것은 아메리카의 정복과 강탈에 의한 축적¹³⁾을 통해서 시작된 근대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탄생을 가리킨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공동토지제도의 붕괴는 현대판 강탈에 의한 축적이다. 따라서 장기 지속의 관점에서 계몽주의 근대성은 식민성을 토대로 가능했다는 점에서 근대 세계체제는 근대/식민 자본주의 세계체제였다. 즉 식민주의와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발전은 근대성을 구성하는 요소이며 세계경제는 강탈에 의한 축적과 함께 시작되었다. 따라서 근대성은 유럽 내적 현상이 아니라 세계체제적 현상이다. 이런 맥락에서 식민성은 근대성의 파생물(derivative)이 아니라 구성물(constitutive)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근대/식민 세계체제에서 식민성이 누락된 것은 유럽중심적 내부성의 사유로 근대성이 정의되었기 때문이다. 세계체제 분석은 공간적 관점에서 국가 간 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했지만 자본축적의 구조와 법칙 대신에 자본주의의 역사적 확장과 변형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유럽중심적 근대성을 옹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두셀이 주장하듯이, 데카르트의 생각하는 자아(ego cogito)보다 150년 앞서 정복하는 자아(ego conquiro)가 등장한 사실을 애써 외면했다. 또한 아메리카 정복이 경쟁적인 문명들(터키 문명, 이슬람 문명, 중국 문명 등)을 상대로 결정적인 비교 우위를 확보하는 도약의

13) 자본축적은 확대재생산과 강탈에 의한 축적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으며, 이 두 가지 측면은 유기적이고 변증법적으로 얽혀 있다.

발판이었음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다(Dussel 2002; Quijano 2000).

식민성은 누락은 유럽의 팽창이나 자본주의의 팽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지도 모르지만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계몽주의 근대성을 치장하는 수사들이 문명, 진보, 발전, 민주주의, 인권이라면 근대성이 가리고 있는 식민성의 얼굴은 폭력, 지배, 착취, 차별이기 때문이다. “이주민들이 원주민들의 터를 빼앗는 방식은 대체로 두 가지이다. 첫째는 폭력이고, 나머지는 합법적인 정당성을 부여받는 일이다. 역사 속의 종교와 정치는 이 두 가지 테크닉을 절묘하게 섞어 자신의 입지를 넓혀온 것이 사실이다.”(김영민 1996, 15). 유럽중심주의의 토대가 되는 목적론적 역사관은 정복과 착취의 합법적인 정당성을 계속해서 바꿔왔는데, 16세기에는 가톨릭 복음의 전파였고, 18-19세기에는 문명화 사명이었으며, 20세기에는 발전주의였다면, 20세기 말에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내세웠다. 이런 개념들은 “중중 소위 자연법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의 외피를 쓴 채 보편적 가치의 표현으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인류에게 유익할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주장됐다.”(월러스턴 2008, 16).

두 번째 근대성을 통해 부각된 유럽중심주의는 근대성이 주변부 문화들이 미성숙 상태에서 벗어나는 출구가 될 수 있는 합리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내세운다. 그러나 첫 번째 근대성은 근대성이 자신에게조차 감추고 있는 비합리적 과정 속에서 탄생했다. 요약하자면, 두 번째 근대성이 내세우는 계몽주의적 합리성은 첫 번째 근대성의 비합리적 폭력의 실천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사학에 불과하다. 이런 맥락에서, 유럽중심적 근대성이 만들어낸 신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근대 문명은 스스로를 우월하고 발전된 문명의 위치에 올려놓는다. 둘째, (히네스 세발베다로부터 칸트와 헤겔에 이르기까지) 근대 문명의 우월성은 야만적이고 원시적이며 난폭한 사람들을 향상시켜야 할 도덕적 의무를 갖는다. 셋째, 이러한 문명화 과정은 유럽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넷째, 야만인들이 문명화 사명에 저항하면 근대화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폭력을 행사해야 한다. 다섯째, 문명화 사명은 불가피한 희생자(식민지 원주민, 아프리카 흑인노예, 여성, 자연의 생태계 파괴)를 만들지만 그것은 의사(疑似) 종교적 희생 제의이다. 여섯째, 야만인들은 문명화 과정을 어기는 죄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문명화는 순수한 사명이며 그들을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해결책이다. 일곱째, 근대성의 문명화 과정에서 치루는 희생과 고통은 미성숙한 사람들이 치러야 할 대가이다(Dussel 2000, 472-473).

사빠띠스따들의 봉기를 알리는 첫 번째 선언문은 “어느 모로 보나 우리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다.”(마르코스 2002, 76)라는 절규의 선언문이다. 그리고 “이제 그만!”이라는 외침은 자본주의 근대/식민 세계체제의 토대를 흔드는 항거의 외침이었다. 이러한 외침이 단지 그들만의 고독한 외침이었을까?

2009년 9월, 나는 프라하에서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의 연례회의를 막기 위해 2만 명의 시위대에 합류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다. 유럽에서 온 시위자뿐 아니라 다른 지역 시위자도 엄청났다. 서로 다른 세력이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가 되었다. 플래카드, 깃발, 최루가스, D자형 자물쇠와 최루탄, 에너지와 이념들이 거리에서 물결쳤다. 그리고 그날 수천 명이 외쳤던 구호는 1994년 1월 산끄리또발 광장에 울려 퍼졌던 “이제 그만!”이라는 바로 그 구호였다(킹스노스 2004, 20-21).

자유, 정의, 민주주의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요구하며 공적 토론의 중심에 등장한 사빠띠스따들의 구호는 라틴아메리카의 종속적·후진적·주변적·국지적인 주체들의 구호가 아니다. 그들의 구호는 중심-주변, 선진-후진, 자율-종속, 세계성-국지성의 이분법적 경계를 허물고 근대/식민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저항하는 모든 사람들의 구호이다. 보편적 인권이 내세우는 최소주의적 원칙은 “모든 당사자 원칙”이다. “이 원칙이 견지하는 바는, 어떤 주어진 사회 구조나 제도에 영향을 받는 모든 이들이 그 구조나 제도에 관련한 문제에서 정의주체로서의 도덕적 입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을 정의의 동료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

은 지리적 접근성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의 공통된 구조적 혹은 제도적 열개 안에서 함께 엮여 있기 때문에 정의의 동료주체가 된다. 즉 그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규제하는 근본 규칙을 설립함으로써 이익과 불이익의 패턴 안에서 그들 각각의 삶의 가능성을 결정짓는, 어떤 공통의 구조적 혹은 제도적 열개 말이다.”(프레이저 2008, 456). 여기서 공통의 구조적/제도적 열개란 5세기 전에 성립된 근대/식민 자본주의 세계체제를 의미하며 유럽중심적 근대성의 시각에서 식민성을 은폐하고 있는 ‘잘못 구성된 틀’이다.

근대/식민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구성 요소인 식민성을 감춘 체 계몽주의 이후 인류 문명의 척도로 등장한 유럽중심적 근대성은 모든 차이들을 삼켜버리는 ‘사탄의 맷돌’(satanic mill)이다. 척도는 스스로에 대해 질문하지 않는 것처럼, 유럽중심적 근대성은 틀의 문제를 사유하는 것을 등한시했고, 틀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어버리는 사람들이 틀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199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은 “권리를 가질 권리”, 즉 “잘못 결정된 틀”을 해체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유럽중심적 이론들이 주장하듯이 미완의 성찰적 근대성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미완의 탈식민성을 완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기에 처한 근대성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주체는 척도의 외부에 존재한다. 척도의 외부에 존재하는 주체를 인정하는 것은 다문화주의의 차원을 넘어서서 일극(一極)으로 존재했던 유럽중심적 근대성을 해체하고 다양한 근대성을 인정할 때 가능하다. 두셀의 말을 빌리면, 일극적 근대성이 해체되고 다양한 근대성들이 소통하는 상황이 트랜스 모더니티(trans-modernity)이다. 따라서 트랜스 모더니티는 완결된 탈식민성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외부에 의한 사유’의 출발이다(김은중 2009a).

VI. 결론에 대신하여 - 차이와 소통의 정치학과 21세기 인권

트랜스 모더니티는 냉전의 종식 이후 일극화된 미국의 헤게모니가 약화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근대성들이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 경합하는 국제정치의 현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와 반대로, 트랜스 모더니티는 소극(消極)화된 다원성(**depolarized pluralities**)을 의미한다. 진정한 의미의 구성적 차이가 드러나는 것은 극성이 제거될 때 가능하다. 유럽중심적 근대성은 자기차이화의 체계로 무장하고 목적론적 발전주의를 앞세워 모든 차이를 동일성으로 흡수했다. 자기차이화의 체계란 앞에서 언급한 ‘내부성의 사유’와 동일하며, 체계의 외부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차이조차도 체계의 내부에서 만들어내는 체계를 뜻한다. 따라서 모든 차이는 체계가 제시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추종할 뿐이고 모든 차이가 상품화되는 동일성의 체계에서 차이는 존재할 수 없다.

인권 정치의 궁극적 목표는 동일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즉 차이를 일률적 가치로 환산하는 척도를 제거하는 것이며,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차이들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 정치는 척도가 지배하는 틀 안에서 다양한 차이들을 인정하는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를 넘어서서 정치적 정체성(**identity in politics**)으로 이동해야 한다. 정체성이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 관계를 규정하는 틀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적 정체성은 정치적 권력과 다르다. 정치적 권력이 또 다시 헤게모니의 장악을 목표로 한다면 정치적 정체성은 차이를 인정하고 차이에서 비롯되는 갈등도 인정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적 정체성의 차이는 동일성으로 합류하는 과정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하는 과정이다. 다시 말해, 동일성의 척도에 의해 관리되고 포섭되어 순치(馴致)된 차이가 아니라 차이를 통해 소통하고, 거역하며, 변화시키고/변화하는 차이이다(김은중 2009b).

199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에서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것

은 자본주의적 팽창에 내재된 불균등발전이 빈곤층의 삶을 비참의 나락으로 몰고 간 결과였다. 하지만 사회운동의 주체들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맞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척도를 자처하는 모든 이데올로기에 대해 물음을 던졌다. 그러나 물음에 대한 자신들의 대답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빠띠스따의 대변인이자 부사령관인 마르코스의 말을 빌리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되 저마다 상황에 맞는 자신의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동일성의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반대는 하나지만 해답은 다양하다는 것(One No, Many Yeses)을 뜻한다. 다양한 대안들은 때로는 국지적이고, 때로는 지역적이며, 때로는 세계적이다. 그리고 세계화가 가져온 긍정적인 결과 중의 하나는 다양한 규모의 대안들의 소통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사빠띠스따들이 투쟁의 과정에서 “인류를 위해 신자유주의에 맞서기 위한 대륙간(間) 회의”를 주최한 것이나 “농민의 길”(Via Campesina)이 세계적 네트워크로 성장한 것, 그리고 2001년 세계사회포럼이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리에서 개최된 이후 지속적으로 다양한 의제들을 생산하고 있는 것 등은 작은 예에 불과하다. 차이의 소통을 통해 그들이 얻은 결론은 차이가 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통합을 위한 조건이라는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은 사회적 불평등과 불의에 저항하는 단기적 전술과 장기(longue durée) 16세기에 시작된 근대/식민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장기적 전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Abstract

Vivimos un tiempo paradójico que exige que las soluciones a los problemas políticos sean discutidas en un campo más amplio de debate sobre la relación entre teoría y práctica. A través de este siglo vemos que los medios que fueron creados para traer una emancipación social están produciendo el efecto perverso. Se violan los derechos humanos para preservarlos, se destruye la democracia para defenderla y se destruye la vida para defenderla. ¿Por qué se produce una discrepancia entre lo que esperamos y lo que se ocurre? Porque, primero que nada, la mayor parte de la teoría crítica fue desarrollada en el Norte global, mientras que las prácticas transformadoras de la sociedad están ocurriendo en el Sur global. Por esta razón, no se necesitan alternativas, sino que se necesita pensamiento alternativo de alternativas.

Concentrándonos en la cuestión de los derechos humanos y luego en el debate sobre la democracia, podemos ver que las contradicciones del mundo capitalista no surgen solamente del conflicto entre capital y trabajo, que es importante, sino también del conflicto entre capital y naturaleza, entre individuo e identidad cultural, y, asimismo entre colonizador y colonizado. Por eso debemos partir de la perspectiva del sistema-mundo moderno/colonial capitalista para ver cuáles son los pasos que debemos dar. Bajo el modelo del sistema-mundo moderno/colonial capitalista, se pasa muy fácilmente del sistema de desigualdad al sistema de exclusión. En el mundo políticamente democrático pero socialmente fascista hay que inventar nuevas formas de democracia, una democracia intercultural que significa reivindicar la demodiversidad.

Los movimientos sociales latinoamericanos que se actualizan desde los fines del siglo pasado combinan una táctica de corto plazo con una estrategia de largo plazo, articulando el doble principio de la interculturalidad y la postcolonialidad. Una nueva civilización que

permite combinar interculturalidad con postcolonialidad se podría llamar transmodernidad.

Key Words: Democracia de alta intensidad, Sistema-mundo moderno/colonial capitalista, Transmodernidad, Movimientos sociales alternativas, Diferencia constitutiva / 고강도 민주주의, 근대/식민 자본주의 세계체제, 트랜스모더니티, 대안사회운동, 구성적 차이

논문투고일자: 2010. 01. 17

심사완료일자: 2010. 01. 29

게재확정일자: 2010. 02. 03

참고문헌

- 고봉준(2007), 『계몽주의와 근대성』, 이진경 외, 『문화정치학의 영토들: 현대문화론 강의』, pp. 441-465.
- 김은중(2009a), 『트랜스모더니즘 혹은 반헤게모니 생태학: 비판이론의 탈식민적(decolonial) 전환을 중심으로』, 이베로아메리카연구, Vol. 20, No. 1, pp. 149-181.
- _____ (2009b), 『유럽중심적 근대성을 넘어서: 권력의 식민성(Colonialidad del Poder)과 경계 사유(Pensamiento Fronterizo)』, 이베로아메리카연구, Vol. 11, No. 1, pp. 1-38.
- 나오미 클라인(2008), 『쇼크 독트린: 자본주의 재앙의 도래』, 김소희 옮김, 살림.
- 낸시 프레이저(2009), 『세계화되는 현실에서의 정의, 새로운 틀구성』, 『뉴레프트리뷰』, 길, pp. 436-464.
- 루이스 레이가다스(2008), 『라틴아메리카 - 지속되는 불평등과 최근의 변화』, 에릭 허쉬버그/프레드 로젠 외, 『신자유주의 이후의 라틴아메리카』, pp. 172-201.
-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기획(2008), 『르몽드 세계사 - 우리가 해결해야 할 전지구적 이슈와 쟁점들』, 휴머니스트.
- 마르코스(2002), 『우리의 말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윤길순 옮김, 해냄.
- 미하일 멘티니스(2009), 『사빠띠스따의 진화』, 서창현 옮김, 갈무리.
- 안토니 기든스(1991), 『포스트 모더니티』, 이윤희/이현희 옮김, 한국사회연구소.
- 에두아르도 갈레아노(2004), 『거꾸로 된 세상의 학교』, 조숙영 옮김, 르네상스.
- 이나시오 라모네 외(2001), 『프리바토피아를 넘어서』, 최연구 옮김, 백의.
- 이매뉴얼 윌러스틴(1999), 『근대세계체제 I: 자본주의적 농업과 16세기 유럽 세계경제의 기원』, 나종일 외 옮김, 까치.
- 이진경(2009), 『외부, 사유의 정치학』, 그린비.
- 이진경 편저(2007), 『모더니티의 지층들 - 현대사회론 강의』, 그린비.

- 이진경 외(2007), 『문화정치학의 영토들: 현대문화론 강의』, 그린비.
- 이브 드잘레이/브라이언트 가스(2007), 『궁정전투의 국제화 - 국가권력을 둘러싼 엘리트들의 경쟁과 지식 네트워크』, 김성현 옮김, 그린비.
- 에릭 허쉬버그/프레드 로젠 외(2008), 『신자유주의 이후의 라틴아메리카』, 김종돈/강혜정 옮김, 모티브북.
- 윌리엄 I. 로빈슨(2008), 『라틴아메리카의 다두제 - “시장 민주주의”라는 모순 어법』, 에릭 허쉬버그/프레드 로젠 외, 『신자유주의 이후의 라틴아메리카』, pp. 141-171.
- 조정환(2002), 『지구 제국』, 갈무리.
- 진중권(2003), 『앙겔루스 노부스 - 진중권의 미학 에세이』, 아웃사이드.
- 카를로스 M. 빌라스(2008), 『남아메리카 좌파와 민족적-민중적 정부의 부활』, 에릭 허쉬버그/프레드 로젠 외, 『신자유주의 이후의 라틴아메리카』, pp. 318-344.
- 캐서린 하이트(2008), 『기억의 정치, 인권의 언어』, 에릭 허쉬버그/프레드 로젠 외, 『신자유주의 이후의 라틴아메리카』, pp. 266-292.
- 코르넬리우스 카스토리아디스(2001), 『자율적인 개인을 위하여』, 이냐시오 라모네 외, 『프리바토피아를 넘어서』, pp. 28-37.
- 폴 킹스노스(2004), 『세계화와 싸운다』, 김정아 옮김, 창비.
- 한나 아렌트(2006), 『전체주의의 기원1』, 이진우, 박미애 옮김, 한길사.
- 현민(2007), 『소수자와 차이의 정치』, 이진경 편저, 『모더니티의 지층들: 현대사회론 강의』, 380-412.
- Dussel, Enrique(2000), “Europe, Modernity, and Eurocentrism,” in *Nepantla: View from South*, 1.3,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pp. 465-478. <http://muse.jhu.edu>
- _____ (2002), “World-System and Trans-Modernity,” in *Nepantla: View from South*, 3.2,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pp. 221-244. <http://muse.jhu.edu>
- Grosfoguel, Ramón, Cervantes-Rodríguez and Ana Margarita(eds.)(2002), *The Modern/Colonial Capitalist World-System in the Twentieth*

- Century: Global Prozesse, Antisystemic Movements, and the Geopolitics of Knowledge*, Westport, CT: Praeger Publishers.
- Kissinger, Henry and Cyrus Vance(1988), "Bipartisan Objectives for American Foreign Policy," *Foreign Affairs* 66, No. 5.
- Laclau, E./ Mouffe, C.(1985), *Hegemonía y estrategia socialista: hacia una radicalización de la democracia*, Madrid: Siglo XXI.
- Mignolo, D. Walter(2000), *Local Histories/Global Designs: Coloniality, Subaltern Knowledges, and Border Thinking*,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2005), *The Idea of Latin America*, Malden, MA: Blackwell Publishing.
- Portes, Alejandro and Kelly Hoffman(2003), "Latin American Class Structures: Their Composition and Change during the Neoliberal Era,"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38, No. 1, pp. 41-82.
- Quijano, Anibal(2000), "Colonialidad del poder, eurocentrismo y América Latina," in Edgardo Lander(comp.), *La colonialidad del saber: eurocentrismo y ciencias sociales. Perspectivas Latinoamericanas*, Buenos Aires: CLACSO, <http://bibliotecavirtual.clacso.org.ar/libros/lander/quijano.rtf>
- Quijano, Anibal and Immanuel Wallerstein(1992), "Americanness as a Concept, or the Americas in the Modern World-System," *ISSAL*, No. 134.
- Santos, Boaventura de Sousa(2001), "Los nuevos movimientos sociales," en *OSAL*, septiembre, pp. 177-184.
- _____ (2009), "Reinventando la emancipación social," en *Cuadernos del Pensamiento Crítico Latinoamericano*, No. 18, marzo, Buenos Aires: CLACSO, <http://bibliotecavirtual.clacso.org.ar/ar/libros/secret/cuadernos/18/18boa.pdf>
- Touraine, A. and F. Khosrokhavar(2000), *A la búsqueda del sí mismo. Diálogos sobre el sujeto*, Barcelona: Paidós.